

“EU·美 이어 日 ‘속도전’…韓, 제도 도입 투자자 이탈 막아야”

가상자산 제도화 현주소

③ 해외 선행 사례 <끝>

한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의 후발주자가 된 만큼, 주요국 입법 사례를 참조해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늦어지는 ‘가상자산 제도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워크(KBW)’에서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구조가 갑갑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제한 논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쟁점이 아닌데도, 국내에서는 쓸데없는 쟁점 때문에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업종별 세부 분류를 마련해 규제 명확성도 확보하는 법안이다. 결제기술 발달로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량도 급증하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당초 지난해 입법 목표로 제시했지만 다수의 쟁점이 부각되며 늦어지고 있다. 논의 초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규제주체를 금융당국과 은행은행 가운데 어느 곳에 둘 지가 쟁점이었고, 이후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 여부가 논의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의 지분 참여를 요구하는 ‘은행 컨소시엄’ 또한 논의 중이다.

강민규 코인원 대외협력본부 이사는 지난 1일 KBW에서 개최된 업계 토론회에서 “국내 거래소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사업 확대 의지가 있더라도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사업이나 혁신을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국 입법사례는

유럽연합(EU)은 지난 2024년 말부터 ‘암호자산시장법(MiCA·미카)’의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연동토큰(ART), 전자화폐토큰(EMT), 일반암호자산으로 분류해 차등 규제하며, 가상자산 발행 시에는 가상자산의 구조와 위험성을 안내하는 백서를 공시하고 규제 당국의 사전 규제를 받도록 정했다.

미국은 ‘가상자산 3법(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반CBDC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통과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00%의 준비금 요건을 제시하며, 관련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발행 전자화폐(CBDC) 발행을 금지해 민간 시장을 활성화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지난달 30일 ‘코리아 블록체인 워크 2026(KBW 2026)’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KBW에는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연사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두나무

작년 입법 목표 ‘디지털자산법’ 쓸데없는 쟁점 때문에 늦어져 EU-미카, 미국-가상자산3법 규제 지속 日도 관련법 마련 중 타국 입법 참조, 韓 법안 만들고 거래소 실적·투자환경 개선해야

하는 ‘반CBDC법’도 통과됐다.

가상자산을 ‘증권성 자산’과 ‘상품성 자산’으로 분류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클래리티법’도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금지 조항에 대해서만 이견을 남겼다.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법안 불발 시에 대비한 대체 법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지속했던 일본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앞서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간주해 자금결제법 중심으로 규제했으나, 지난 7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재분류했다. 주식·채권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공시의무도 확대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 국내 환경에 맞는 법안 필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참조해 국제표준과 국내 금융환경에 맞춰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상자산 산업도 다양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입법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매출이 악화하고 있고, 가상자산 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 기업들은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비롯해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 완화가 논의돼야 한다”라면서 “해외에서는 혁신이 한창인데, 국내의 규제만 제자리걸음을 하면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로 계속 이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리서치 전문기업 타이거리서치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가상자산 투자 수요와 대중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지만, 주요국에 비해 가상자산의 제도화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명확한 정책으로 시장을 포용하고 있고, 정책 차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도 권역별로 편편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과도기에 있지만,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 또한 산재해 있다”면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지분율 논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지형도를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해킹 막아라” 2금융권, 예산 늘려 보안전문 업체 물색

KB·스마트저축, 보안사업 입찰 사이버 공격 대응·파일 전송 제한 실험중앙회, 14억 투입 보안 강화

2금융권이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보안사업 발주에 나섰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다. 3년 혹은 5년 이내 금융권 정보보호 사업 수행 실적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며 전문성을 갖춘 업체 물색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최근 ‘KB저축은행 정보유출 방지 통합 보안 고도화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보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구축한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AI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선 금융권 관련 이미지.

/Chat GPT

기술이 악용된 점을 고려,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신 기술의 사이버 위협을 분석해 보안 환경을 개선하고, 지능형 위협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경계형, 단말, 지능형 위협 보안 등 전 방면의 보안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저축은행도 ‘스마트저축은행 원격 보안 접속 솔루션 도입’ 사업 입찰에 착수했다. 원격 접속자가 내부 자료를 캡처하거나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격 접속 시 2단계 인증과 접속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화면 캡처 방지 및 파일 송수신 통제 기능을 구축한다. 아울러 원격 작업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든 작업 내역을 녹화하는 등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눈에 띄는 점은 입찰 참가 자격에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저축은행 역시 최근 3년 이내 금융회사에서 원격 보안 접속 솔루션을 5건 이상 도입한 실적을 요구했다. KB저축은행은 최근 5년 이내 국내 금융권에서 유사

사업을 수행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실험중앙회가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4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약 5개월이다.

실험중앙회도 최근 3년 이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0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 또는 유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금융권 보안 사업을 수행한 전문업체와 손잡고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보안 컨설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2금융권이 보안 사업 발주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인공지능(AI) 활용 해킹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피에프씨티, 모우다 등 2금융권 업체에서 외부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종 금융사기 ‘꼼짝마!’… 우리은행 ‘차세대 예방체계’ 구축

경찰출신 전문인력 활용 전담반 설치

우리은행이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경찰 출신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중심으로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통신정보를 결합해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속도도 개선한다.

우리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금융사기예방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종 금융사기 수법 및 피해예방 성과를

공개했다. 우리은행은 경찰 출신 전문인력을 활용한 금융사기 전담부서를 은행권 최초로 설치해 운영 중이며, 금융사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금융사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금융사기 예방은 고객의 자산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라며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징후를 한 발 앞서 포착해 고객의 자금이 사기범에게 넘어가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도화·분업화하는 금융사기

우리은행은 금융사기의 핵심 원인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기회’와 ‘추적·검거가 어려운 범죄 구조’를 지목했다. 기술 발달과 분업화로 금융사기 검거를 위해 국가 간 사법공조 및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면서, 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시간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유익해야 할 금융사기 수법으로 ‘피그부처링’과 ‘리커버리 스캠’을 제시했다.

‘피그부처링(Pig Butchering)’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형성한 뒤, 투자 등을 권유하는 수법이다. 처음부터 거액을 요구하기보다 소액 투자 및 수익 경험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는 거액을 이체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감정적 신뢰를 형성하고 투자나 입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또한 피그부처링의 또다른 형태다.

‘리커버리 스캠(Recovery Scam)’은 이미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접근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2차 사기다.

◆ 우리은행, 금융사기 대응 고도화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대응을 개별 직원

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존하는 대신, 은행권 최초의 금융사기 대응 전담부서인 ‘금융사기예방부’를 설치해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책임자로는 경찰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금융사기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전재홍 총괄수석을 영입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자금세탁방지(AML) 부서간 통합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의심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 FDS 부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639건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파악해 AML 부서에 전달했으며, 추가 분석을 통해 83건을 의심거래보고(STIR) 조치했다.

/안송진 기자